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구독

2026.4.7.(화) 제26-26호
KOTRA 워싱턴 D.C. 무역관

KOTRA 워싱턴 D.C. 경제통상 브리핑은 미국의 주요 경제통상 현안 이슈를 중심으로 매주 2회(화/목) 배포합니다.



워싱턴 D.C. 경제통상 브리핑

주요 내용

워싱턴 D.C. 포커스

• (예산) 2027 회계연도 대통령 예산안 주요 내용 및 산업별 시사점 ····· 2
– 국방 $1.5조 증액·비국방 10% 감축 제안...의회 심의 과정에서 상당한 갈등 예상

경제통상 동향

• (관세) 미 국제무역법원(CIT), 무역법 122조 관세 소송 첫 심리 예정 ····· 5
• (통상) 美 철강 232조 관세체계 개편에 대한 현지 평가 및 업계 반응 ····· 6
• (수출통제) 美 의회, 반도체 장비 대중 수출통제 강화법 발의 ····· 7
• (공급망) 미국산 원유 프리미엄 급등으로 아시아·유럽 대체물량 확보 경쟁 심화 ····· 8

의회법안 동향

•반도체 수출통제 등 입법 2건 ····· 9

이시각 헤드라인

•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 ····· 10
• 워싱턴무역관 공지사항 ····· 11

워싱턴 D.C. 주요일정

4.8(수)	• 연준 3월 FOMC 회의록(Minutes of Fed's March FOMC meeting)
4.9(목)	• 4분기 경제성장률(두번째 개정판)(GDP (second revision))
4.10(금)	• 3월 근원 소비자물가지수(Core CPI)
4.13(월)	• 3월 기존 주택판매(Existing home sales)

(예산) 2027 회계연도 대통령 예산안 주요 내용 및 산업별 시사점

1. 개 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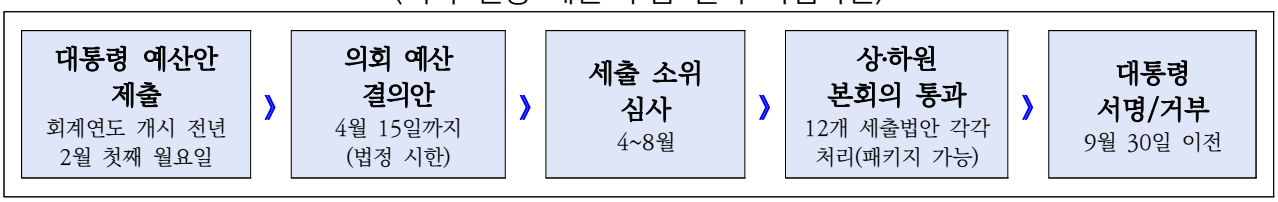
□ 백악관 예산 관리국(OMB), 2027 회계연도 대통령 예산안 발표(4.3)

- 전반적 재정지출은 억제하되, 국방·치안·국경안보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비국방 부문은 구조조정과 함께 정부 역할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편성
  - '예산 조정'(reconciliation) 절차를 활용하여 민주당 협조 없이도 국방 및 국경 관련 투자 확대를 입법화하려는 전략적 설계 제시

□ 행정부의 대통령 예산안 제출로 의회 예산 입법 절차 공식 개시

- 대통령 예산안은 법률적 구속력이 없으며, 행정부의 정책 우선순위를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신호 문서(signal document)로서의 성격이 강함
  - 이번 예산안은 법정 제출 시한(2월 초)을 넘겨 4월 3일 제출되었으며, 의회는 이를 토대로 12개 세출 소위원회별 지출 법안 초안 작성에 착수할 예정

〈미국 연방 예산 수립 절차 타임라인〉



[자료] 백악관 예산관리국(OBM)

2. 주요 내용

□ '안보 우선(Security First)' 중심의 재정 재편

- 국방비를 역대 최대 수준인 약 1.5조 달러(전년 대비 44% 증가)로 대폭 확대하여 군사력 강화, 방산 생산 능력 확충, 첨단 무기체계 개발 추진

  * 재량 예산 1.15조 달러에 더해, 예산 조정을 통해 3,500억 달러 별도 반영

  - 법무부·국토안보부 예산을 포함한 치안·이민·마약 대응 예산도 동반 확대
    ⇒ 국경 장벽, 구금시설, 단속 인력 확충 등 강성 이민·국경 정책에 집중

□ **산업·에너지·기술 정책 방향 전환**

- 재생에너지 중심에서 전통 에너지 및 자원 개발 중심으로 정책 축 이동
  ⇒ 재생에너지·EV 인프라 예산 1,500억 달러를 전통 에너지 개발로 전환

- 핵심광물·원자력 등 전략 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 확대
  ⇒ 핵심광물·에너지혁신실(CMEI)에 11억 달러 예산 신규 배정

- AI·양자 등 핵심기술 분야는 선택적·전략적 지원 유지
  ⇒ 기저 전력 긴급 배치 35억 달러, AI 슈퍼컴퓨터 구축 12억 달러 배정

□ **'해양 패권' 회복을 위한 전략적 투자**

- 군사·경제·자원 확보를 포괄하는 해양 전략 강화와 함께 조선 산업 및 해양 데이터 수집·처리 역량 확대 추진
  ⇒ 조선 분야에 658억 달러를 투자하여, 전투함(18척)·비전투함(16척)· 육군 및 해안 경비대(5척)·기타(2척) 포함 총 41척 발주

□ **비국방 지출 축소 및 구조조정**

- 환경·기후 정책, DEI 관련 사업, 일부 복지 및 보조금 등 비국방 재량 지출을 730억 달러(전년 예산 대비 10% 삭감) 감축 제안

  - 재정 효율화를 넘어, 정책·이념적 우선순위에 따른 '선택과 집중' 전략 추구

□ **무역·수출통제 집행 역량 대폭 확충**

- 관세 아젠다 강화를 위한 무역 집행 기관의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 편성. USTR·상무부 BIS를 중심으로 인력·조사 역량 집중 증강
  * USTR 예산 전년 대비 +45% / BIS 예산 전년 대비 +88%

  - Investment Accelerator(투자 촉진청)에 1억 달러 예산 배정. CHIPS Act 자금 집행·민간 투자협약·외국의 투자약정 관리 등 컨트롤타워 기능

□ **연방정부 역할 축소 및 지방 분권 강화**

- 연방정부의 직접 개입을 축소하고 지방정부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 제시

  - 교육·노동·복지 등 일부 정책 영역에서 주(State) 및 지방정부의 재량을 확대하고, 연방 프로그램의 유연하고 자율적인 집행 허용

〈2027 대통령 예산안에 담긴 산업별 시사점〉

분야	예산 개요	기회/위험 전망
방산·조달	· 국방 $1.5조(+44%) 대폭 증액 · 조선 $658억-41척 발주(루스벨트 대통령 이후 최대) - 해군 함정 건조 및 유지보수 수요 급증	(기회) △미 조선소 MRO·부품 공급 협약 △SHIPS for America Act 입법 연계 기회(직접 수주 경로) 등
반도체·AI인프라	· AI 슈퍼컴퓨터 7기 구축($12억), · 기저 전력 배치($35억) - 소형 원전(SMR), 천연가스 피킹 설비 포함	(기회) △HBM(고대역폭 메모리) 및 첨단 패키징 수요처 선점 △AI 데이터센터 전력 인프라 연계 수주
해양·물류·인프라	· Maritime Security Trust Fund 신설 · 해사 인력 개발($1억) · FAA 관제($4억) - 노후 항공관제 인프라 교체	(기회) △미 해사 서비스·항공전자 납품 참여. △인프라 확충 사업에 건설·엔지니어링 합작 참여
에너지·핵심광물	· CMEI 신설($11억) - 핵심광물·차세대 에너지 투자 · 전략비축유 충전($8,900만)	(기회) △미국 내 광물 가공·정련 합작 투자 △우리 배터리·소재 기업의 현지 공급원 확보
바이오·헬스케어	· NIH $50억 감축 · FDA AI 도입 ($5,700만) · 동물실험 대체 기술 지원 확대	(관망) △NIH 협력 축소 대비 민간 R&D 채널 전환 필요 △AI 신약 개발 플랫폼 수출 틈새 탐색
자동차·EV	· EV 충전 보조금 $4.2억 취소 · ARPA-E EV 관련 예산 삭감 - 차세대 배터리·구동계 R&D 지원 축소	(위험) △미국 내 EV 시장 성장 둔화 △배터리 투자 환경 악화 등
무역·통관·수출	· BIS +88%(역대 최대) - 수출통제·관세 집행 인력 대폭 증원 · USTR +45% - 관세 조사·분쟁 대응 및 무역 협정 집행 역량 확충	(위험) △반도체·장비·소재 우회 수출 단속 강화 △관세 회피·원산지 허위 신고 집행 강화

[자료] 대통령 예산안 및 현지 언론 보도 종합 분석

▪ 작성자	워싱턴 D.C.무역관 이정민
▪ 자료원	백악관 OMB(4.3), AKIN(4.6), NYT(4.2)

경제통상 동향

(관세) 미 국제무역법원(CIT), 무역법 122조 관세 소송 첫 심리 예정

• (배경) 트럼프 행정부, 무역법 122조 관세 10% 부과에 따른 소송 제기

-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0% 글로벌 관세 부과 발표(2.24), 이에 반발해 24개 州 정부 및 민간 수입업체 2곳이 국제무역법원(CIT)에 제소
- 뉴욕 국제무역법원(CIT) 대법정에서 첫 구두변론 예정(4월 10일(금) 오전 10시(동부 시간)

• (상세) 발동 요건 충족 여부, 사법심사 범위, 법 해석 등 원고·정부 간 변론 예정

- **(원고 주장)** ▸무역적자는 국제수지 위기와 다른 개념으로 122조의 법적 발동 요건* 불충족, ▸ 국가·품목별 예외 적용은 법상 무차별 원칙 위반, ▸트럼프 대통령의 122조 기반 관세 부과 판단은 위헌적 권한 주장 → 관세 전면 중단 요구

* 대통령은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 달러 가치 하락 시 등 비상 상황에서 의회 승인 없이 모든 수입품에 최대 15% 관세를 최장 150일간 부과(7.24 기한) 가능, 연장 시 의회 승인 필요

- **(정부 반박)** ▸경상수지 적자는 곧 국제수지 적자를 의미, 발동 요건 충족, ▸국가·품목별 예외는 122조가 허용하는 별도 조항에 근거, ▸대통령의 판단은 사법심사 대상이 아님 (Florsheim 판례* 근거) → 정부 패소 시 구제는 소송 당사자에 한정

* 판결문은 "대통령의 행동이 권한 내에 있고, 해당 법률의 수권 조항 범위 내에 있다면, 사법부의 역할은 거기서 끝난다"라고 명시

〈 무역법 122조 관세 소송 관련 원고/정부 간 주요 쟁점〉

주요 쟁점	원고 (24개 주, 수입업체 2개사)	피고 (미 법무부)
발동 요건/법 해석	무역적자는 국제수지 위기가 아님 국제수지의 경상·자본·금융계정 모두 적자여야 무역법 122조 발동 가능 주장	법률 상 국제수지 적자는 경상수지 적자로 '24년 경상수지 적자는 1971년보다 더 심각해 요건 충족 국제수지(경상·자본·금융) 합산은 항상 0으로, 원고 해석에 따르면, 122조 법 자체가 무용지물 주장
예외 부여 문제	국가·품목별 예외 적용은 법상 무차별 원칙 위반	122조 별도 조항에 근거한 합법적 예외
사법 심사	대통령의 국제수지 위기 판단은 위법	대통령의 판단은 타당하며, 사법 심사 대상 아님
가처분 효력 범위	관세 전면 중단	구제는 소송 당사자에 한정

[자료] 현지 언론 종합

▪ 작성자	워싱턴 D.C. 무역관 문현주
▪ 자료원	폴리티코(4.7), 인사이드(4.7), Trade Law Daily(4.7)

(통상) 美 철강 232조 관세체계 개편에 대한 현지 평가 및 업계 반응

• (개요)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파생제품 232조 관세 산정체계 재조정

- 美 행정부는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파생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 산정체계를 재조정했으며, 업계 및 전문가는 동 개편을 파생제품의 실효 관세부담을 높이는 조치로 평가

〈美 232조 금속 관세체계 개편 주요 내용('26.4.6. 시행)〉

구분	주요 내용
적용 대상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관련 파생제품
주요 내용	파생제품 과세기준을 (기존) 금속 함량가치 → (개편) 완제품 전체 가격으로 전환
관세율 체계	원자재성 금속제품 50%, 파생제품 25%, 일부 금속집약 설비 15%, 미국산 금속 사용 해외생산품 10%
면제 기준	금속 함량이 중량 기준 15% 이하인 제품은 232조 관세 면제
품목 운영	기존 공식 절차 종료, 향후 행정부 판단에 따라 수시 지정 가능

• (상세) 파생제품 과세기준, 금속가치에서 완제품 전체 가격 기준으로 전환

- 기존에는 철강 파생제품에 대해 제품 내 철강 함량가치 기준으로 50% 관세를 부과했으나, 개편 이후에는 완제품 전체 가격 기준으로 25%를 적용하도록 변경

* 총 가격 1,000달러, 철강 가치 200달러 제품의 경우, 관세는 기존 100달러에서 개편 이후 250달러로 확대

- 철강 원재료비 외 가공·조립·노무비 등 부가가치까지 과세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표면상 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실제 관세부담은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 제기

- 파생제품 추가 지정 절차가 종료되고, 향후 행정부가 대상 품목을 수시로 결정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이 조정되면서 제도 예측 가능성 저하 우려도 제기

• (반응) 현지, 동 개편을 사실상 관세 강화 조치로 평가하며 후속 보완 필요성 제기

- 동 개편은 세율 인하를 표방하나, 과세기준을 완제품 전체 가치로 전환함에 따라 상당수 철강 파생제품의 실효 관세부담을 높이는 방식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

- CBP의 비공개 내부지침을 통해 확대 적용돼 온 과세방식이 공식 제도에 반영됐다는 점에서, 금번 개편은 기존 집행기조를 공식화한 조치라는 해석도 제기

- 일부 업계는 완제품 및 하류 파생제품에 대한 관세 확대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향후 품목 확대, 별도 301조 조사 활용 등 추가 제도 보완 필요성 강조

▪ 작성자	워싱턴 D.C. 무역관 정연호
▪ 자료원	CATO(4.6), 폴리티코(4.6)

(수출통제) 美 의회, 반도체 장비 대중 수출통제 강화법 발의

• **(개요) 미 의회, 대중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통제 법안 발의, 동맹국 동참 촉구**

- 미국 의회가 중국을 대상으로 한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을 제한하는 하드웨어 기술 통제의 다자 간 조정(Multilateral Alignment of Technology Controls on Hardware Act, MATCH) 법안 발의(4.2)

- 동맹국에도 미국과 유사한 규제 도입을 요구하고, 미이행 시 후속 조치 가능성 명시

• **(상세) 중국 첨단 반도체 기술 확대 억제 및 글로벌 규제 조율 추진**

- **(하원 법안)** 글로벌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통제 강화 및 동맹국 규제 조율 요구

- **(상원 법안)** 하원 법안과 연계된 내용으로 4월 중 발의 예정

- **(동맹국)** 150일 내 동맹국의 수출통제 조치 이행 여부를 평가·인증, 미이행 시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 적용을 통해 비미국 기업 제품까지 규제 확대

- **(규제 방식)** 상무부는 우려 국가에 반도체 제조 장비에 대한 서비스 제공 시 거부 정책(policy of denial)에 따라 허가를 요구되며 장비 설치·유지보수·서비스 제공 제한

- **(적용 대상)** 중국·쿠바·이란·북한·러시아 등 우려 국가 내 첨단 반도체 생산시설이며 법안 시행 시점 기존 제조 시설·일부 반도체 제조 공정 시설 제외

- **(행정 조치)** 상무부(BIS)·국무부가 대상 장비·시설 목록을 작성(법 시행 후 60일 이내, 이후 연례 갱신) 하며 동맹국은 이행 유예 최대 90일 허용 가능

▪ 작성자	워싱턴 D.C. 무역관 김기범
▪ 자료원	인사이드(4.3), 블룸버그(4.2)

(공급망) 미국산 원유 프리미엄 급등으로 아시아·유럽 대체물량 확보 경쟁 심화

• (개요) 중동산 공급 차질에 미 원유 현물 프리미엄 사상 최고치 기록

- 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중동산 원유 흐름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아시아와 유럽 정유사 간 미국산 원유 확보 경쟁이 심화
- 이에 따라 미국산 원유 현물 프리미엄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상승

• (상세) 중동산 대체 수요 확대로 미 원유 프리미엄·운임 동반 상승

-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못하는 중동산 원유를 대체하기 위해 아시아 구매자들이 미국·아프리카·유럽 등지에서 대체 물량 확보에 나서며 유럽과 경쟁 심화*

* 7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미들랜드유의 북아시아 도착 기준 프리미엄은 배럴당 30~40달러 수준까지 상승했으며, 이는 3월말~4월 초 약 20달러 수준보다 높은 가격

- 유럽에서도 WTI 미들랜드유 도착 기준 입찰 가격이 브렌트 대비 배럴당 15달러에 가까운 수준까지 상승하며 사상 최고 프리미엄 기록
- 미국산 원유의 브렌트 대비 할인폭 확대로 미국 걸프 연안 유조선 수요가 늘면서 선복 가용성이 줄고 운임이 상승

• (반응) 원유 가격 급등에 따른 가격 변동성으로 정유업계 부담 가중

- 원유 가격 급등으로 아시아·유럽 정유사의 조달 비용이 상승 및 손실이 확대가 이어지고 있으며, 정부 방침상 연료 생산을 지속해야 하는 일부 국영 정유사에도 부담 가중
- 시장에서는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크며, 일부 정유사의 경우 원유 정제 대신 정제제품 구매가 더 유리할 수 있다는 평가도 제기

▪ 작성자	워싱턴 D.C. 무역관 김예나
▪ 자료원	로이터(4.6)

의회법안 동향

구분 (현행일)	법안 (발의일)	대표 발의자	법안 및 주요 내용
반도체 수출통제 (3.31)	H.R.8170 (하) (3.31)	Michael Baumgartner (공)	〈Multilateral Alignment of Technology Controls on Hardware (MATCH) Act〉 ▪ 반도체 제조장비(SME) 수출통제의 핵심 공백을 보완, 미국 국가 안보 강화 목적으로 대외직접제품규칙(FDPR) 적용을 통한 미국 소프트웨어·기술·부품 사용 외국산 제품에 대한 관할권 확대 ▪ 핵심 통제 장비 국가 단위 전면 금지(우려국 대상 필수 SME 수출 차단) ▪ 대중국 규제 강화: CXMT, 화홍(Hua Hong), 화웨이, SMIC, YMTC 및 모든 자회사·계열사가 운영하는 모든 팹(FAB)에 대한 제한 확대
수출통제 (4.06)	H.R.8202 (하) (4.06)	Ryan Mackenzie (공)	〈수출통제 위반 공소시효 연장 법〉 ▪ 수출통제개혁법(ECRA, 2018) 개정안으로, 수출통제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연장 ▪ 현행 ECRA 하에서는 수출통제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 민사(BIS 관할) 및 형사(DOJ 기소)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

* 미국 동부 시간 4월 7일 15시 모니터링 기준

⚖ 의회법안 동향

구분 (현행일)	법안 (발의일)	대표 발의자	법안 및 주요 내용
원전 에너지 (3.26)	S.4267 (상) (3.26)	Cynthia Lummis (공)	〈2026년 미국 원자력 에너지 강화법(Strengthening American Nuclear Energy Act of 2026)〉 ▪ 트럼프 대통령의 원전 관련 행정명령 4건을 법제화하는 법안 ▪ 해당 행정명령: 1. 국가안보 목적의 첨단 원자로 기술 배치 2. 원자력규제위원회(NRC) 규제 개혁 3. 에너지부(DOE)의 원자로 시험 제도 개혁 4. 원자력 산업 기반 재활성
예산 (3.27)	H.R.7147 (하) ('26.1.20)	Tom Cole (공)	〈2026년 국토안보부 추가 계속결산법안(Homeland Security and Further Additional Continuing Appropriations Act, 2026)〉 ▪ 상원 통과 후 하원 계류 중 ▪ DHS 전 부처 자금 지원, 단 ICE 및 국경세관국(CBP) 일부 제외
수출통제 (3.30)	H.R.8169 (하) (3.30)	Ann Wagner (공)	〈수출통제 업데이트 신속화법〉 ▪ 2018년 수출통제개혁법을 개정하여 엔티티 리스트에 대한 추가·삭제·수정 제안의 심사를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법

* 미국 동부 시간 3월 31일 15시 모니터링 기준

현지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
The Wall Street Journal	Trump Rebuked Over Threat to Wipe Out Iran Civilization (트럼프, 이란 문명 말살 위협에 질책 이어져)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7일 8시 최후통첩을 하며 이란 문명을 말살시키겠다고 위협한데 따라 론 존슨 상원의원은 민간 인프라 폭격은 큰 실수라고 말하는 등 정계 비난이 이어져
The Washington Post	Trump says 'a whole civilization will die' as Iran freezes talks (이란 협상 동결에...트럼프 "한 문명 전체가 사라질 것")
	트럼프는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을 시 한 문명 전체를 말살하겠다고 위협해.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수정헌법 25조를 들며 트럼프 탄핵을 주장했고, 이란은 아직까지는 굴복 의지를 밝히지 않아
The New York Times	How Tolls in the Strait of Hormuz Would Undercut International Law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가 국제법을 약화시키는 이유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UN 해양법에 위배되나, 미국과 이란은 동 조약을 비준하지 않았고 두 국가 모두 통행료 부과를 예고해. 통행료가 실제로 부과될 시 다른 국가들도 동 선례를 뒤따를 수 있으며 조약 탈퇴국도 늘어날 수 있어
CNN	The cascading global impact of the Iran war, visualized (중동 전쟁의 글로벌 파급 효과)
	원유 가격 상승으로 에너지, 운송, 여행비용이 상승했고 해협의 명목현상도 주요 수출품의 적체 및 가격 급등을 초래해. 그 외 안보 리스크 증가로 운송 보험료가 대폭 인상되고 모스크 등 종교시설도 일부 폐쇄돼
USA Today	Gas prices are skyrocketing. These states had the biggest jumps (가장 유가가 많이 상승한 주는?)
	주별 휘발유세, 공급원과의 거리, 소매업체간 경쟁 등으로 인해 주별 휘발유가가 상이하며, 지난주 가장 유가가 크게 급등한 주는 플로리다, 지난 한 달간 가장 많이 상승한 주는 유타주로 밝혀져

* 미국 동부 시간 4월 7일 16시 기준

워싱턴 D.C. 무역관 공지사항

◈ 주요 경제통상 현안을 빠르게, **경제통상리포트** (과거 리포트 : ☞해드림 글로벌이슈모니터링☜)

발간번호	제목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발간시기
US26-10	제14차 WTO 각료회의 주요 논의 동향 및 향후 전망	2026.4월
US26-09	美, 과잉공급·강제노동 관련 301조 조사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	2026.3월
US26-08	미국 2025년 수출입 동향 분석 및 향후 전망	2026.3월
US26-07	2026 워싱턴 국제무역회의 주요내용 및 전망	2026.3월
US26-06	미 재무부 환율보고서 발표에 따른 주요 교역국 환율정책 평가	2026.2월
US26-05	트럼프 정부의 IEEPA 관세 대안으로 수입 면허제 활용 가능성 검토	2026.2월
US26-04	트럼프 행정부 출범 1주년 경제·통상 성과 및 현지 평가	2026.2월
US26-03	2026년 주요 통상 일정과 미국 통상정책 환경 변화 전망	2026.1월
US26-02	유엔과 세계은행이 전망한 2026년 세계 경제 및 정책 제언	2026.1월
US26-01	2026년 글로벌 핵심 리스크와 미국 정책 환경 변화 전망	2026.1월
US25-51	골드만삭스 2026년 세계경제 전망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25.12월
US25-50	美 2026 국방수권법(NDAA)로 살펴본 미국 국방정책 방향	2025.12월
US25-49	미·중 경제안보 검토 위원회(USCC) 의회 연례 보고서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25.12월
US25-48	워싱턴 국제무역협회 'Trade & Tech Summit' 내용 및 시사점	2025.12월
US25-47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을 둘러싼 미국의 인식 전환과 통상 질서 변화	2025.12월
US25-46	2026년 USMCA 공동재검토 주요 일정 및 3국 입장과 현지 평가	2025.12월

◈ 전문가가 읽어주는 경제통상 이슈, **코트라 인터뷰 시리즈** (과거 인터뷰 : ☞유튜브 KOTRA TV☜)

인터뷰 번호	제목	바로가기
코인시-26 (2026.2.6.)		
코인시-25 (2026.1.24.)		

문의	이메일	전화
	jwshim@kotra.or.kr	+1) 202-857-7919
	shim.nature@kotra.or.kr	